

‘애순’의 삶에 눈물 흘리는 2030 청년 남성들

〈‘꼭꼭 속았수다’ 여주인공〉

에스프레소

이 동 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제주서 여자로 태어나니니 소로 나 는 게 낫다고 울 엄마가 그러네요.”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꼭꼭 속았 수다’의 주인공 애순의 어린 시절은 기구하기만 하다. 서울을 동경하는 문 학소녀의 꿈은 지독한 가난 앞에 번번 이 좌초된다. 공부벌 제법 잘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의 기회 는 쏙쳐려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그녀 의 작은아버지는 종손을 위해 여공이 될 것을 요구한다. 식모살이에 이골이 난 애순이 할 수 있었던 건 “내 자식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뿐이 었다.
‘꼭꼭 속았수다’에선 여성 서사가 한 축을 이룬다. 작품은 1951년생 오애 순과 그 세대 여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차별, 설움을 격정적으로 그려낸다. 동 생들을 위해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지만 밥상머리에서조차 동등한 대우 를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여성 서사에 서 남성들은 부덕이하게 못한 존재로 그려지곤 한다. 박보검이 연기한 관직 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예외적 인물이다. 보통은 무능하고 지질한 남 성들이 여성 주인공의 성취 혹은 좌절 을 돋보이게 한다.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여성 서사를 다

룬 콘텐츠들은 “과장이 심하다”거나 “남성을 약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남 성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다. 작 품 평점을 놓고 남녀가 공방을 벌이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그런데 ‘꼭꼭 속았 수다’는 사뭇 다르다. 여성 서사가 핵심 열개를 이루는 이 작품에 2030 남성들 이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드라마를 보고 울었다”는 시청 소감이 끊이지 않는다. 젊은 남성들도 애순과 같은 중·노년 여성들이 경험한 설움에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또래 여성은 약자 인정 안 하지만 중·노년 여성들이 겪은 차별엔 젊은 남성, 부정하지 않고 공감 남녀 갈등 해결 실마리 됐으면

2030의 남녀 갈등은 남성들이 ‘여성 은 약자’라는, 오랫동안 유지돼 온 사회 적 합의로부터 이탈한 데서 비롯됐 다. 실제로 198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 라 여성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56.2%에 그쳤다. 대학교 취학률도 8.1%로 남성 의 절반 정도였다. 이 시대를 경험한 세 대는 ‘여성은 약자’라는 명제에 반기 를 들지 않는다. 상황이 달라진 건 2000 년대부터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남성을 처음 앞지른 이래 줄곧 5~7%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남녀공학이 본격적 으로 확대됐다. 남학생 학부모들이 내 신을 이유로 남녀공학을 기피하는 일

도 흔하게 일어났다. 학교에서 치이는 데스투 삶이 넘으면 군대로 가야 한다. 청년 남성들이 “왜 우리 또래 여성들이 약자냐”고 항변하는 이유다.
2030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마초인 가? 각종 연구에 따르면 이 집단의 성 평등 의식은 기성세대 남성은 물론 중 장년 여성보다도 높은 걸로 나온다. 여 성가족부가 2022년 공개한 ‘2021년 양 성평등 실태조사’에서도 가사·돌봄 분 담, 성역할 등에 있어 “기성세대가 암묵적으로 갖고 있던 성 고정관념이 청 년층에서 완화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특별한 게 있다면 반페미니즘 정 서가 강하다는 점도다.
‘꼭꼭 속았수다’를 향한 청년 남성 들의 호응은 남녀 갈등 해결의 실마리 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정지권은 남녀 간 차이를 부각하는 식으로 갈등을 키 워왔다. “구조적 성차별이 있나 없나”로 싸웠던 지난 대선이 그랬다.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여성 혐오’ 딱지를 붙 였다. 그제 남성들의 반발을 더욱 키웠 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통점에 주목하 는 건 어떨까. 또래 여성들이 차별받은 집단인가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존재 하지만, 수많은 ‘애순이’들이 경험한 차별은 2030 남성들도 부정하지 않는 다. 중·노년 여성들은 여전히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 노후 대비는커녕 저 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 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 한다면,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2030의 남녀 갈등도 언젠가 해소할 수 있지 않 을까 싶다.

우정아와 아트 스토리 [576]

광산에서 발견된 백골

마나면 미래에 지구상에서 인류가 사라진 뒤 기계만 남는다면 이런 풍경이 될 것이다. 문명의 흔적을 찾기 힘든 황량한 대지에 화석처럼 메마른 백골이 드러나 있고, 그 주위에 로봇 팔들이 둘러 서 있다. 카메라와 센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팔은 마치 고대의 제사장 이 장례를 치르듯 유리구슬과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금속 물체들을 이리저리 옮 겠다가 먼 곳을 가리키는 등 수직 않고 움직인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 문을 던져 온 프랑스 미술가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1962-)의 영상 설 치 작품 ‘카마타’의 한 장면이다.
다른 행성 같은 이곳은 지구에서 가 장 메마른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제목

인 ‘카마타’는 그 가운데 위치한 세계 최대의 노천 구리 광산 ‘추키카마타’에서 따왔다. 실제로 거기서 발견된 영 상 속 백골은 20세기 초 사망한 광부의 것이다. 처음 이 백골을 마주한 위그는 나약한 인간의 육신과 소멸할 운명을 타고난 모든 생명의 유한함, 그리고 인 류 멸종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떠올렸 다. 하지만 인간보다 강인하고, 훨씬 더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냉철하게 판단 하는 인공지능은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영원히 작동할 것이다. 어쩌면 ‘카마타’에서 오래전 사망한 인간을 위해 정 성껏 제사를 지내는 로봇이 인간의 진 화형은 아닐까.
현재 ‘카마타’는 서울 리움 미술관



피에르 위그, 카마타, 2024년-진행 중, 기계 학습으로 구동되는 로봇틱스, 자기생성 영상, 실시간 인공지능 편집, 사운드, 센서 등, 이미지 리움미술관 제공.

에서 진행 중인 위그의 개인전에서 상영되고 있다. 시작도 끝도 없이 반복되 는 영상은 전시장에 설치된 센서를 통 해 수집된 환경 데이터에 따라 실시간 으로 AI가 편집한다. 위그의 전시는 사 람과 환경이 모두 AI를 위한 ‘데이터’로 치환되는 세상을 구현했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説

李 대표, 대선 승리에 장애물 될까 개헌 반대하나

6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입장과 계 획을 밝히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를 제도화 하기 위한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 표는 7월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 식이 먼저”라면서 “국민의힘이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 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3년 전 4년 중임제와 임기 1년 단축을 약속하며 개헌에 적극적이던 모습과 달라졌다.
다만 이 대표는 사전 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뒤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정도의 개헌은 할 수 있 다고 했다. 자기 진영이 동의하는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만 하 자는 것인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견어내자는 당초 취치 와는 동떨어진 제안이다. 이 대표는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개 헌은 대선 이후에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호헌(護憲)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된 뒤 제왕적 권력을 다 휘둘러 보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野는 점령군 행세, 與는 네 탓 샅대질, 尹은 사저 정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 보궐선거 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 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했고, 이인주 의원은 국민의힘 상황을 옛 통합진보당과 비교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에서 응답자의 33%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지지하는 정당을 북한을 추종하다가 해산당한 통합진 보당에 빗대며 정당 해산을 거론하는 것이 가당한가.
이 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 선 기간 지원받은 보조금 397억원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불 과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나올까 전전긍긍하 며 법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정당이 맞나 싶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재수사도 검찰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고위 공

이 대표와 달리 민주당 비명계는 개헌에 적극적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선 때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하자”고 했고, 김 두관 전 의원은 개헌을 위해 임기 2년 단축을 수용할 의사가 있 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며 보수·진보 상관없이 대부분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유일하게 이 대표와 진명계만 반대하고 있다. 역대 개헌 논의를 보면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개헌은 대 선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한 뒤, 당선되고 나면 자기 임기 중 개 헌에 반대해왔다. 이 대표가 눈앞에 다가온 선거 승리에 개헌론 이 장애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고려를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기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상당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개헌에 동의하는 것이 왜 대선 경쟁에 방해가 되겠나.
국민 6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이번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선 주자들은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유권자 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직자나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인사 등은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전 면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눈에는 이런 민주당이 벌써 대 선에서 승리한 양 점령군 행세를 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다.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대선 과정의 해당(害黨) 행위에 “가혹할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다. 그 이전에는 최근 김상욱 의원이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을 민 주주의 기념일로 삼자고 주장하자, 친윤 측에서 징계를 요구하면 서 불거진 당내 갈등이 있을 것이다. 양측 모두 할 말이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다소간 이견도 포용하지 못하고 친윤(親尹)·비 윤(非尹)으로 나뉘어 분열할 만큼 여유 있는 처지인가.
이런 국민의힘의 내분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스스 로 행동을 삼가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기한 국정 혼란으로 국민은 이미 유무형의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 다. 그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쳐 조기 대선까지 치르게 됐 다.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에 시동을 건 것처럼 비치는 것은 상당수 국민 눈에 거북하게 보임은 물론 당 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 하방 압력 높아진다는 KDI 경고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녁 달 연속 경기 침 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하방 위험 이 커지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달 들어서는 “경기 하방 압력 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2월에 전산업생산은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조업 일 수가 1.5일 늘어남 효과일 뿐 실제로는 산업 전반의 생산 둔화 가 뚜렷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21.0%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도 부진하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자동차 판매가 호조 를 보이면서 내구재 판매는 두 자릿수(13.7%)로 늘었는데 준내 구재(-6.8%)와 비내구재(-7.5%) 소비가 줄어 1~2월에 평균 소 매 판매는 1.1%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3.7%), 예술·스포 츠·여가서비스업(-5.6%), 교육서비스업(-1.8%) 등 서비스 부 문 생산도 크게 감소했다.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도 3월은 전월(0.7%)보다 높은 3.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불안한 움직임이 이 어지고 있다. 1분기 전체로 수출은 2.1% 감소했다. 특히 ICT와 선박을 제외하면 2월에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6%, 3 월에 -0.8%로 위축세가 뚜렷하다.
4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되면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전방위로 타 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맞선 중국의 보복 관세 등 우리나라의 양대 교역국인 G2가 관세 전쟁을 이어가면 수출 외바퀴로 버티는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에 휩싸이게 된다. 미·중 관세 전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0.8~0.9%)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둘러 추경 편성을 확정해 가라앉은 경제에 마중물을 붓고 경제 불안 심리로 누그러뜨려야 한다.

비(非) 좌파는 왜 패배했는가?

윤석열은 죽여 싸고, 이재명은 살려 마땅한가?... 한국판 저질 《대중 민주주의》!

- ① 한동훈의 배신
- ② 선전선동에 높아나는 어리석은 국민 대중
- ③ 정치 이권 카르텔 화원 된 올드 미디어의 기회주의



▲ 사진평론 그저 '세세-'. 차베스 흉내 내며 "현금 13조 나눠줄게-". 2개월 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세상 오는 건가? 나치 일당독재 하를 러처럼 한국판 독재자가 출현하는가? © 뉴데일리

타락한 민주주의

《비(非) 좌파》는 왜 패배했는가? 잘못이면 졌을 리가 없다. 될 잘못했을까?

귀에 쏙 들어오는 쓴소리가 하나 있었다. 탈북한 전 북한 체고 무역대표부 김태산 씨가 한 말이다. “한국적 자유민주 주의가 나라를 망쳤다.” 《타락한 민주주의》였다. 어떻게 타 락했나?

나라 망친 3가지

① 자유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과 남한 좌익이다. 이것을 앞에 두고 한국 《비(非) 좌파》 정치 엘리트들은 번번 이 분열했다. 권력투쟁이었다. 가짜 뉴스에 기초한 명분 싸 움이었다. “박근혜-최서원이 어렸다.” “윤석열-김건희가 어 려다.”

이래서 《비(非) 좌파》 일부가 탄핵에 찬성했다. 박근혜 때 의 바른미래당. 윤석열 때의 한동훈계. 언론, 공멸이었다.

② 국민 대중도 《남 탓과 [마주기]에 맞 들였다. 이 증독증 을 부추기는 선동에 휘둘렸다.

★TV가 병든 소 비틀거리는 조작 화면을 보여줬다. 그걸 본 《매》가 좀비들의 난(亂)을 일으켰다. 《광우병 난동》이었 다.

★ “박근혜 청와대에서 굶을 했다.” 《가짜 뉴스》였다. 선 동 당한 폭증(暴衆)이 촛불을 들었다. 탄핵이었다.

★ 사드 배치가 《독물물 참외》를 만들어 냈다. 《운동꾼들 의 거짓 선동》이었다. 세상이 벌떡 뒤집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 현재에서 있었던 거짓 증언이었다. 그러나 재판관 8명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 《혁명재판》? 《정 치재판》? 《사법의 정치화》? 《사법 카르텔》?

이 모든 사례는 결국 《타락한 대중민주주의》의 민낯이 었다. 그 괴수(怪獸)가 한국과 한국 민주주의를 집어 삼켰 다.

③ 올드 미디어들도 《민주주의의 타락》을 향해 [고독한 광야의 소리]를 낼 입장이 못되었다. 오히려 한술 더 떴다. 올드 미디어 업(業) 자체가 《정치 이권 카르텔》이었기에.

한동훈과 올드 미디어에 묻는다

한국 민주주의가 실패하면, 그것은 누구의 이득으로 돌 아가는가? 자유-우파 진영의 《주적》에게 돌아간다.

이재명부터가 살판났다. 윤석열은 죽여 싸고, 이재명은 살려 마땅한가?

좌파에게 묻는 게 아니다. 비(非) 좌파 《탄핵 정파-탄핵 언 론》에 묻는 것이다. 정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 내부 총질하고 탄핵질》 하라.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두 달 후면 대통령 선거다. 《비(非) 좌파》 대통령 지망자들 은 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고 싶은가? 그러 면 후보 자리 놓고 대가리 터지게 싸워라. 단일화 거부하고.

대통령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냐고?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 뒤꼍을 봐도? 또 감옥에 갈 터인데? 자기는 그럴 리 없다고? 판사들이 번번이 좌파 펀드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나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되진 않을 터” 라 확신했을 것이다. 좌파가 설치는 한, 또 탄핵될 수 있 다. 그레도? 못 말할 대통령 병이다.

2개월 후 한국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을 수 있 다. 한국적 폭민(暴民) 정치는 그저 《한대제철》처럼 단호히 받아쳐야만 했다. 너무 늦었다.

기업은 1류, 정치는 4류라 했던가? 아니 5류?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4월 5일 게재 되었습니다.

